행정안전위원회
2021. 2. 18.(木)

업 무 보 고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목 차

Ⅰ. 일반 현황 ····· 1

Ⅱ. 2021년 주요 추진업무 ····· 7

Ⅲ. 국민체감 경찰개혁 추진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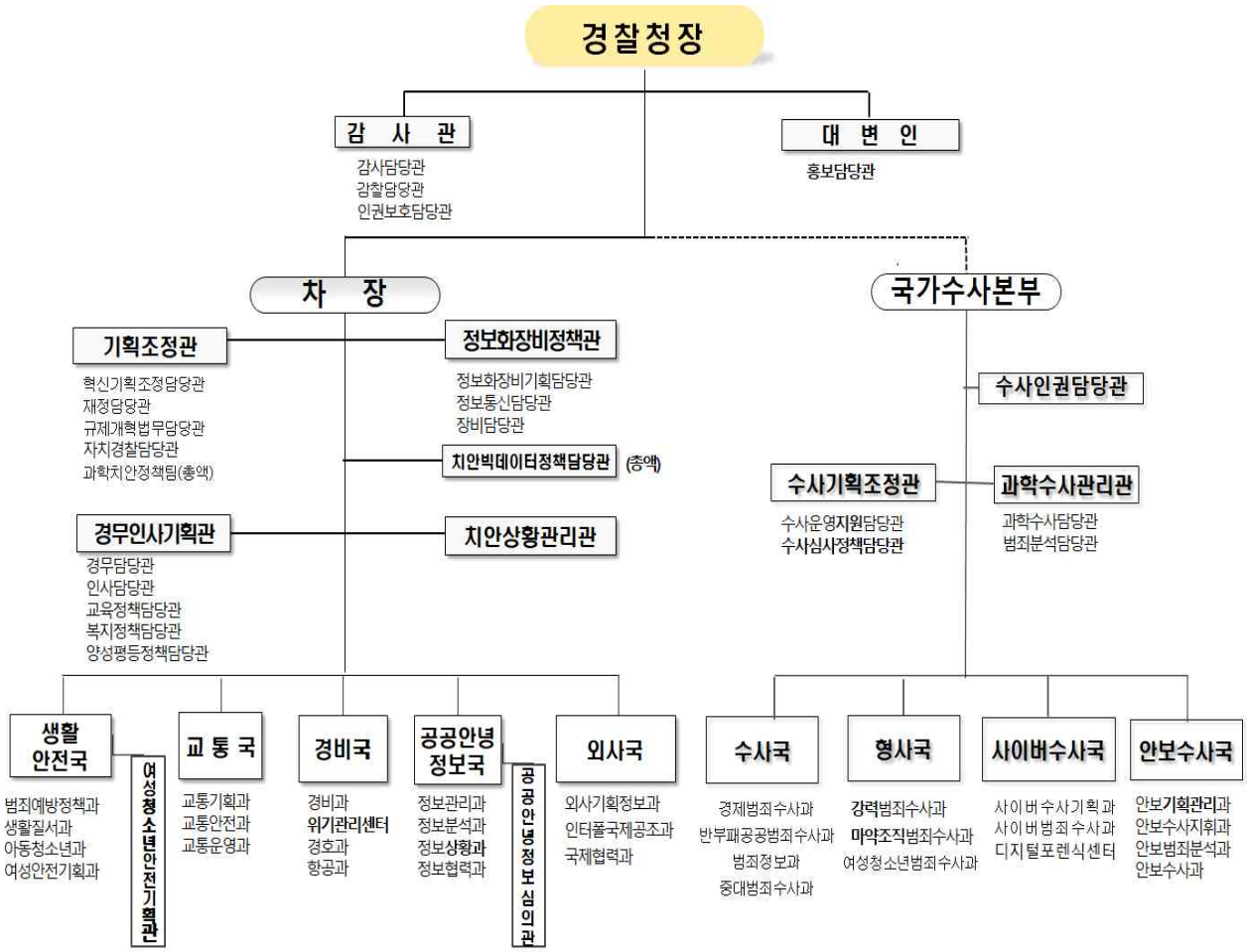
Ⅳ. 중점 추진 법안 ····· 25

〈 참고 : 참석자 명단 〉 ····· 29

Ⅰ. 일 반 현 황

1 일반현황

1 기 구



- ✓ **본청은 1차장, 1본부, 9국, 10관, 32과, 23담당관**(1팀 포함)
- ✓ **부속기관 5개**
  -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 **시·도경찰청 18개, 경찰서 257개, 지구대·파출소 2,024개**

2 인 력

총 원 — 141,810명

경찰관	의경	일반직	교육공무원
126,746(89.38%)	9,986(7.04%)	5,056	22
		5,078(3.58%)	

경 찰 관 — 126,746명

< 계 급 별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	7	30	77	575	2,885	9,745	15,762	25,883	32,093	39,688
690(0.5%)					12,630(10.0%)		113,426(89.5%)			

< 관 서 별 >

경 찰 청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경 찰 서	지구대·파출소
1,199(0.9%)	533(0.4%)	25,843(20.4%)	49,014(38.7%)	50,157(39.6%)
			99,171(78.3%)	

< 기 능 별 >

계	공공안전(30,230 / 23.9%)								수사(25,018 / 19.7%)					자치(20,808 / 16.4%)			지역경찰	부속
	대변인	감사	정보화	경무	치안상황	경비	정보	외사	과수	수사	형사	사이버	안보	생안	여청	교통		
126,746	169	1883	1132	3240	4647	14926	3018	1215	1329	9965	9372	2071	2281	3416	6866	10526	50157	533
100%	0.1	1.5	0.9	2.6	3.7	11.7	2.4	1	1	7.9	7.4	1.6	1.8	2.7	5.4	8.3	39.6	0.4

일 반 직 — 5,078명

< 관 서 별 >

경 찰 청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경찰서
708(15.7%)	772(17.3%)	1,400(27%)	2,198(40%)

3 예산 및 소관 법률

'21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 예산		'21 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11조 6,165**	**11조 3,604**	**11조 9,651**	**6,047**	**5.3**
○일 반 회 계	11조 5,343	11조 2,786	11조 8,824	6,037	5.4
- 인 건 비	8조 8,653	8조 6,539	9조 744	4,204	4.9
- 기 본 경 비	4,283	4,246	3,676	△570	△13.4
- 사 업 비	2조 2,407	2조 2,001	2조 4,404	2,403	10.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78	774	781	8	1.0
- 인 건 비	424	419	419	-	-
- 기 본 경 비	44	44	28	△16	△35.9
- 사 업 비	310	310	334	23	7.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4	44	46	2	3.5
- 사 업 비	44	44	46	2	3.5

소관 법률

경찰 소관 법령(75건)			경찰청 행정규칙(188건)		
법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훈령	예규	고시
26	30	19	123	46	19

Ⅱ. 2021년 주요 추진업무

지난해에는



□ 일상의 평온이 확보되는 안전 공동체 구현

○ **코로나19**에 맞서 보건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방역방해 행위 엄단**

※ △신속대응팀 8,559명 편성, 소재추적 등 방역 지원 △역학조사 방해·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단속

○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 및 여성보호체계 확충

※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발족('20.3.), '박사', '갓갓' 등 성착취사범 3,575명 검거(245명 구속)

○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대폭 감소

※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고령운전자 원스톱 면허반납 체계 구축 등

□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책임 있는 경찰개혁 추진

○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 경찰 **수사시스템을 혁신**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 1.)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조직개편 및 하위법령 정비**

※ (전문성) △수사부서장 자격제 △지휘역량 진단 / (공정성) △사건배당 표준화 △사건심사·지도 강화 등

○ **주민밀착·지역특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법제화

○ **정보경찰 개혁을 제도화***하는 한편, **인권강령 선포** 등 **인권친화** 행정 구현

* △정보활동 범위 명확화(경직법 등)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경찰공무원법) 등

□ 현장 대응역량 향상 및 경찰관 자긍심 제고

○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 및 **현장 법집행 지원**을 통한 **경찰 사기진작**

※ △경감근속 기간단축(10년→8년) △정년임박자 우선근속 △긴급車 특례범위 확대 등

○ 제한된 교류 여건 속에서 **국제경찰공조**를 확대하며 **치안강국 위상 제고**

※ △韓경찰 최초, 인터폴 펀딩('20.2.)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452억원 수출계약 성과) 등

○ **경찰 업무에 첨단기술을 적용**, 업무 추진 효율화 및 국민편의 증진

※ △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도입 등

1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는, 든든한 이웃경찰

□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종합적·체계적 안전망 구축

< 아동학대 단계별(출동~사후관리) 대응 절차 개편 >

○ **(현장출동)**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전문인력 **동행출동 활성화**,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출입·조사권 강화 등 1.26. 시행)에 따른 **현장조사 실효성 제고**

※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제작 등을 통한 지자체·복지부 등 협업 강화

○ **(학대판정)** 현장에서 학대혐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2월), 전문가 참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학대여부 심층 판정

※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기준(2회↑신고·치료소견 등) 충족시 분리조치 및 수사착수

- 시도경찰청 산하 **13세 미만 아동학대 특별수사팀** 신설, 수사역량 강화

○ **(사후관리)**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합동조사 및 관서장 보고를 통해 조치사항 관리·감독 강화, 2회 이상 신고사건은 **유관기관 합동 방문점검**(반기 1회 이상)

< 여성 대상 범죄 근절 >

○ **(성폭력)** △AI조서 작성* △여청 강력팀 확대** 등 **성폭력 범죄 대응 고도화**

*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동 조서작성 시스템 / '20년 59개 경찰서 → '21년 88개서 설치 추진
** 피의자 불상사건 등 전담 / '20년 14개 경찰서 시범운영→'21년 1급지 경찰서 확대(149개)

○ **(불법촬영)** △무선 IP카메라 탐지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탐지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치단체별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지원

○ **(청소년 성매매)** 채팅앱·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 집중 단속**(상·하반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피해자**' **권리** 적극 보장

< 위기청소년 및 노인·장애인 보호 >

○ **(위기청소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청소년 문제 전문가'로 육성**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체계화***하여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 활성화 및 '청소년 정책자문단' 전국 확대

○ **(노인·장애인)** 노인학대 발견율 제고를 위해 **집중신고기간(6월) 운영**, 발달장애인 사건 발생 時 △전담경찰관 조사 △의료기관 연계로 보호조치 활성화

□ 서민을 침해하는 생활 주변 불법행위 엄단

○ **(사기)** 전국적인 사기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조직을 확충하여 총력 대응

※ △**(인력)**전화사기 144→191명, 범죄수익추적 78→149명 △**(조직)**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 신설(17개청 22개팀)

- 분야별 집중단속과 함께, △범죄 의심번호 차단 시스템 구축(통신사 협업) △TV·유튜브 광고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

* △**(신상공개)** 추가범죄예방을 위해 주요 고액사기범 온라인 신상공개 입법 등 추진
△**(지급정지 범위)** 기존 보이스피싱 등 → 몸캠피싱, 물품거래사기까지 확대 추진
△**(배상책임)** 중과실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협의(금융위)

○ **(생활주변 범죄)** 연쇄 다액 침입절도 등 **발생초기 가용자원 집중투입**

※ **특별단속** : △**(침입 강절도)** 3월~5월, 9월~11월 △**(공공장소 등 생활 주변 폭력범죄)** 2월~5월

- 장물 유통경로 역추적 등을 통해 **피해품 회수**에 집중하고, **경미사범·생계형 범죄** 등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사회보장제도 적극 활용

□ 범죄징후를 차단하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체질화

○ **(경찰활동 축 전환)** △지역안전순찰 △예방적 형사활동 △예방정보 활동 등 全분야에 걸쳐 **범죄·불안요인의 사전 감지·제거**에 초점

○ **(데이터 치안) 과학적 방법**을 통해 **범죄·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 조치

※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21.3월) △AI기반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20.12월) 등 활용

○ **(기반 구축)** 경찰이 **위험상황에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 **(제정)**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112신고 기본법 등
- **(개정)** △가정폭력·아동학대 임시조치 절차 간소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법)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청소년성보호법)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요청권 신설(실종아동법) 등

- 시·도경찰과 **범죄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1월)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원 총력

○ **(예방접종 지원)** △백신 비축장소·접종센터 안전관리 △백신 수송지원(에스코트·호송경비) 등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한 지원활동** 만전

※ 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본부」 격상 운영(2월)

○ **(수사활동)** △**감염병예방법 위반**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상시 단속, 백신 관련 변사사건 발생 시 국과수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사인 규명

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당당한 책임경찰

□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 부패 · 불법행위 척결

○ **(부패 범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불공정 · 편법 행위(인사·채용비리, 지역 토착비리,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시기별 · 테마별 특별단속 실시**

- **재보궐 선거**(4.7.) 관련 수사전담반 편성('20.12.~), **5대 선거사범** 집중단속

• **(개요)** 서울·부산·울산남구·경남의령 등 자치단체장 4명 △지방의회의원 16명(2.6.기준)
• **(단속체제)** 후보자 등록일(3.18.)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24시간 즉응태세
• **(집중단속)**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 **(마약류 범죄)** 진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을 위해 **전문수사팀 확대*** 운영, 다크웹 **추적기술** 고도화(전자통신연구원 협업, ~22년)

* △다크웹 전문수사팀(現3개청→권역별 확대설치) △의료용 마약수사팀 신설(서울·경기南·대구청)

○ **(범죄수익 추적 · 동결) 은닉재산 추적**을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하고, 국세청 · 금감원과의 교류확대 등 금융 · 회계자료 **분석 전문성 향상**

※ 경찰에 '기소前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20.9., 마약거래방지법) / '20년 813억 보전(전년比 16%↑)

□ 해외거점 총책 ·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국외 도피사범) 도피사범**이 집중된 국가(중국 ·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에 84.8%)를 중심으로 **국제경찰 합동단속을 통한 검거 및 송환** 확대

• **상반기**('20.11.~'21.3.) : 인터폴 주관 경제범죄 합동단속, 보이스피싱 등 중점
• **하반기** : 2차 한 · 중 · 일 · 아세안 도피사범 합동단속, 서민생활 침해사범 중점

○ **(국제공조 네트워크)** 국제범죄 **공조수사 ·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망 확충

• **(유로폴 실무약정 체결)** 유럽 경찰과 공조수사 등 공식협력채널 구축(상반기 체결)
• **(사이버범죄 협약)** 사이버범죄 수사공조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
• **(국제기업)** 구글·페이스북 등 IT기업 및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와 자료제공 등 협력 강화

○ **(특사경 협업)** 문체부 등 특사경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 국제공조 기반 강화

• **(문체부)** 경찰청·인터폴·문체부 3자간 MOU 체결(상반기), 저작권법 위반 범죄 공동 대응
• **(문화재청)** 인터폴 사무총국 및 문화재청과 협업, 국외유출 도난문화재 D/B 보완
• **(사감위)** 국내외 불법 도박범죄 관련 정보공유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공조 강화

□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 사망자 감소 목표: '17년 4,185명 → '22년 2,000명 / '20년 말 기준 3,080명(잠정)

○ 「**안전속도 5030**」(도심부 속도하향 정책) **전국 시행**(4월)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법·제도 정비 및 시설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정착**

- **(법·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 등
- **(시설개선)** △보행량이 많은 도로 차로폭 축소 △굴절차선 확대 등 저속운행 유도

○ 음주운전의 근본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난폭·보복운전 △화물차 불법행위(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개조 등) △車보험사기 등 **교통범죄 단속강화**

*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연구 등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에도 주력

- **(이륜차)** △상습위반지역 캠코더 단속 확대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 추진(중앙선 침범 등)
- **(PM)** △민·관 협의체를 통한 자율 규제 △PM 면허 신설 추진 △안전규제 조례제정

□ 집회권과 안전·질서가 조화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 **대화경찰***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적 대응**

* '19년 5월~'20년 12월 54,421회 배치(전체 집회·시위의 37%), 갈등완화 등 2.5만건 실적 / '행정한류 우수 콘텐츠 선정'('20년, 행안부)을 계기로 치안한류 콘텐츠로 활용·발전

○ **심야 주거지역 등 소음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평온권·건강권 보호

※ 집시법 시행령 개정('20.12. 시행) △심야 주거지역 소음(60dB→55dB) △최고소음도 도입(75~95dB)

□ 테러 및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전담조직(특공대 등) 확대 △장비 첨단화 등 **대테러 인프라 확충**

- **(전담조직)** △특공대 '20 13개→'21 15개(충남·전남)→'22 18개 △인천공항 대테러 기동대 증편(47→82명)
- **(장비)** △드론 탐지기(14대, 신규)·전파차단기(14→22대, +8대) △차량테러 저격총(5정 신규) 확보

- 국내 개최 예정인 **P4G 정상회의**(5.30.~31.) 경호경비 등 안전관리 철저

○ 의무경찰 감축·폐지에 따라 △대테러·대간첩 △화생방 △경호 등 국가안보 관련 **특화부대**를 운영하고, 경찰서별 '**작전 초동조치팀**' 구성

○ 33종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의 핵심·공통 내용을 정리한 '**지휘관용 표준매뉴얼**' 제작 및 **재난장비 보급·관리 체계화**로 재난 대응력 제고

3 국민 · 현장과 동행하는, 따뜻한 공감경찰

□ 인권존중 문화 정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인권영향평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경찰관 **불법행위에 동료가 개입·제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집회시위 관리에 대해서도 실시(시범운영:서울·부산·경기南, ~'21.9.) / ** 의제발굴, 정책제안 활성화
*** 美경찰의 EPIC 프로그램을 참조, 역할극 시나리오 수행 등을 통해 인식개선 도모

- 경찰수사 과정 상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조사실·유치장 등 400억원 투입)

○ ▵**회복적 경찰활동** ▵**범죄피해 평가제도** 확대 운영, 형사절차上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범죄피해의 근본적 치유 도모

• **(회복적 경찰활동)** 가·피해자 관계회복·재발방지 도모 / '20년 142→'21년 200여개서 확대
• **(범죄피해 평가제도)** 전문가 평가를 사건기록 첨부 / '21년 전문가 추가 확보(127→177명)

- ▵**스마트워치·임시숙소** 지원 확대 ▵112시스템과 연계한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심리전문요원 충원** 등 보호·지원 강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 및 전문가 역량 확보

○ **시민참여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통해 '청렴'을 조직문화로 정착

• **(반부패 협의회)** 외부 전문가가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정책 수립-진단-평가 및 개선안 권고
• **(시민청문관)** 반부패 경력자 등 관서별 배치('21년 +199명), 취약요소 진단·청렴문화 확산 등
• **(대국민 인식조사)** 반기 1회 국민 대상 경찰 청렴 수준 설문조사 실시, 결과는 대국민 공개

- **직무범죄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내부비리에 강력히 대처하고, ▵고위직 정기 순환인사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등 **유착고리 제거**

* 각 시·도경찰청 산하 감찰수사팀 신설 / 내부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2월), 신고포상금 지급

○ 일선 경찰관들이 **'준비된 치안전문가'**로서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상황 시뮬레이션 등 체험式 교육·훈련 강화

※ ▵현장팀장 대상 훈련과정 신설(年 7,862명) ▵'팀단위 집중 훈련일' 운영 등

- 관서장·관리자 기본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직급별로 필요한 소양·역량 함양**, ▵**관서장 자격 검증*** ▵**관서장 중심 불만민원 대응** 등 지휘관 책임성 강화

*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도입('21년), 청렴도·업무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서장 보직 부여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치안시스템 구축

○ 과학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과학치안정책팀)하고 각종 치안문제 해결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R&D사업 고도화**

※ △'21년 예산 492억원(전년대비 118%↑) △'21년 신규사업* 8개 포함 34개 과제 추진
* △확장현실(XR) 기반 교육훈련(40억) △AI기반 수사 지원(11억) △자율주행 지원(162억) 등

○ 비대면 생활양식 정착에 맞춰 **방문 없는 수사·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하반기) 등으로 국민 편의 증진

• **(수사)** △사이버범죄 온라인 증거 제출 및 출석 최소화(ECRM)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도입
• **(민원)** △온라인 민원(48→83종) △즉시처리 민원(5→10종) △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연동 추진

- **현장영상 공유 기술**을 통해 **신속·정확한 상황파악 및 현장대응 강화**

※ △보이는 112 △순찰차 캠 영상관제 △신고자 주변 CCTV→상황실·순찰차 전송 등

○ 우수한 치안기술·장비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KOICA·KOTRA 협업 등을 통해 수출로 연계, **국내 치안산업 진흥**에 기여

- **치안한류(K-Cop Wave)**를 공공외교 콘텐츠화하여 외교자산으로 활용

□ 경찰관 자긍심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 높은 위험성·책임성 등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기본급 조정**과 함께,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종 수당 현실화** 추진

• **(기본급)** 경찰직은 공안직에 비해 기본급이 평균 4.4% 적음(경감·순경 제외)
• **(수당)** △112출동수당 지급 확대(22~06시→24시간) △여청 기능 수당신설 △당직비 현실화 등

○ **특수건강검진, 트라우마 치료** 등 경찰관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장경찰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추진

• **(건강)** △야간 특수건강검진비 증액 추진 △마음동행센터 상담원(센터별 1→3명) 증원 추진
• **(안전)** △안전을 최우선한 매뉴얼 개편 △안전장비 규격 관리 △'안전거리' 개념 도입·교육

○ 성차별 정책요소 점검 및 성비위 예방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복지 확충 △순직·공상 경찰관 예우 등 일선경찰 **사기진작**

• **(복지)** △어린이집 확충(5차 17개소 예산 확보) △수련원 신축 및 환경개선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확대
• **(순직·공상)**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추진(3→5년) △추모행사·장학지원 등 보훈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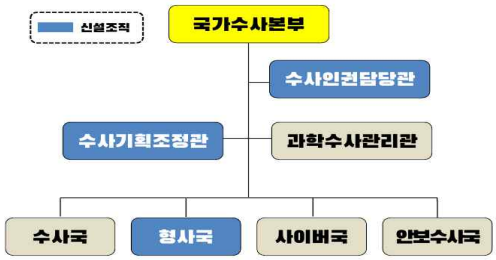
Ⅲ. 국민체감 경찰개혁 추진

1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

<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의미 >

√ **'21. 1. 1. 경찰수사 총괄·조정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설치, 수사의 책임성·완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 국수본 산하 2관·4국·1담당관 체제



√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범죄진압'에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면 전환**

- **'공감'·'공정'·'인권'**의 가치 아래,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상향 균질화**

※ '21. 1. 4. 경찰청,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 발표



□ 책임수사를 완성하는 '3대 핵심역량' 확보 과제 추진

○ **(수사지휘 역량 고도화)** 국가수사본부 및 시·도경찰청 등 관서 間 지휘 및 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팀장** 등의 **수사 지휘 역량 제고**

※ △수사 과·팀장 수사지휘역량 평가 시스템 구축 △수사부서장 자격제 △책임수사관 제도 등

○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확대)** 직접수사 **인력 증원**(224명 증원)과 이관 사건 확대(경찰서→시·도경찰청), **전문분야별 중심청 운영** 등 **역량 강화**

○ **(수사종결 역량 확보)**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내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외부) 등 **심사체계 구축**, 종결사건의 완결성 제고

- **<수사심사관>** △영장신청 △불송치 결정 등 **'수사단계'에서 사건심사·분석**
- **<책임수사지도관>** 종결사건 정기(수시)점검 등 **'수사종결' 후 사건심사**
-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심의신청·미제사건 등에 대한 **'외부' 심사**(확대시행 예정)

□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체계

○ **(법적 통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검 간 협력'에 기반한 검사 등의 **구체적·개별적 통제장치가 수사절차 곳곳에 마련**

- **<수사 중인 사건>** △사건기록등본 송부 및 시정조치 요구권, 송치요구권, 징계요구권(법령위반·인권침해 등 경우) △(사건경합 시) 검사 우선권 △검사 영장청구권 등
- **<송치 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 **<불송치 사건>** △90일간 사건 검증권 △재수사요청권 △90일 이후 추가 재수사요청권 △송치요구권 /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시 송치의무 등

○ **(내부 통제)** '수사-지휘-종결' 등 **단계별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 **<수사진행>** △제척·기피·회피 제도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 도입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 △심야조사 원칙 금지 △조사 시 수갑 사용금지 △고소·고발 남용 방지 대책 등
- **<영장신청>** △영장심사 제도 △영장신청단계 격상(과장) △유치장 환경개선 및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압수·수색 시 이견제시 보장 등
- **<종결>** △수사심사제도 △수사심의신청 제도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수사공보제도 개선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 △송치전 자료·의견 제출기회 보장 등

○ **(비위·부패 차단)** 제도개선을 통해 **수사 상 비위발생 요인 원천 제거**

- **<인사배치>** 유착비리 전력자는 경중 무관 수사부서 전입 차단, 수사경과 필수 배제
- **<신고·접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신고·접수단계부터 수사부서장이 사건을 직장하여 수사팀 배당 및 집중 관리 / 사건 유형별 필수 초동조치사항 집중지휘
- **<사건심사 강화>** △모든 사건심사 時 유착 위험도를 필수적으로 심사 △유착 우려사건(주요 풍속사건, 전·현직 경찰관이 피해자 등)은 의무적 심사대상으로 관리

□ 내사사건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 **(보고·지휘) 수사사건과 동일하게 보고·지휘*토록** 관리하고,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에 이관**하여 직접 처리

* **모든 사건 접수·발생 時 중요사건 여부 판단**을 거쳐 **경찰서 → 시·도경찰청 → 국가수사본부 보고**

중요사건 구분		보고 시기(경찰서→시·도경찰청)			내용
		접수보고	진행보고	결과보고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	-	-	-
경찰서 수사	집중지휘	✓	✓	✓	시·도경찰청 집중지휘팀 운영 등
	경찰서 책임수사	✓	-	✓	접수·종결 時 보고원칙

○ **(종결심사)** 내사**종결 절차**도 수사사건과 마찬가지로 **3중 심사 적용**

○ **(향후계획)** 내사처리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관련 **규칙 개정 등 검토**

2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 자치경찰 출범 준비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추진체계)** △**경찰청 총괄준비단**(단장 : 차장) △**시·도경찰청 실무추진단**(단장 : 차장 · 부장) △**시·도 준비단**(단장 : 부시장 · 국장) **구성 · 운영**

• **<전국 시·도경찰청 실무추진단>** △단장(자치경찰차장·부장) △팀장(총경) △경정 이하(3~6명) 구성 완료('20.12.28.) / • **<전국 시·도 자치경찰 준비단>** △단장(행정부시장·국장) △4급 이하(2~9명) 구성 완료('21.1.22.)

○ **시·도경찰청 및 시·도 준비 인력**은 향후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時 **위원회 사무국으로 흡수, 합동 근무 예정**

□ 법령 정비 및 표준 조례안 작성·공유

○ **(후속 법령 정비)** 법 시행('21.1.1)에 맞춰 **관련 대통령령(5개) 제·개정**

• **<경찰청 소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개정)

• **<행안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규정(제정)→同 시행규칙 2월 중 제정 예정(경찰청 소관)

- **경찰청 행정규칙**(191개) 및 시·도경찰청별 행정규칙도 일괄정비 추진

○ **(조례)**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와 공유**(2.3.)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시·도별 조례 제정 추진**(2 ~ 3월)

※ 위원회 사무기구의 분장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기존 시·도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 행안부 제시)에 규정

< 법 - 대통령령 - 조례 위임 체계 >

법	대통령령 기준	조례(위임 사항)
법 제4조②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규정 (소관 : 경찰청)	자치경찰사무(생안·교통·경비) 구체적 사항 및 범위
법 제20조⑧		위원의 임명방법 등
법 제26조④		위원회 운영(실무협의회, 위원 수당 등)
법 제27조④	기구정원규정 (소관 : 행안부)	위원회 사무기구 조직·정원·운영 등
법 제35조②	없 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지명)**권을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법 제20조)

※ △위원추천위(2명)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시·도지사(1명)

- 현재 각 시·도별 **'위원추천위원회'를 우선 구성*** **중**이며, **2월말까지 全 시·도에서 구성 완료 예정**

* 경찰청장 1명(추천), 기초의회의장단 협의체 1명(추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 1명(추천), 지방법원장 1명(추천), 시·도 기조실장(당연직) 등 5명

○ 각 시·도에서는 **개별기관**(국가경찰위원회, 시·도의회, 교육감 등)**에서도 추천을 받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예정으로,**

- **가급적 3~4월까지 전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천위 위원 **추천**(경찰청장) △**요청시 위원 인력풀 제공 등 지원**

□ 사무기구 구성

○ 행안부는 시·도에 **기준정원을 배정***하고, 각 시·도는 치안 수요·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무기구 구성 예정**

* △서울 24, 부산 22, 경기 32, 인천 22, 제주 11, 세종 4명 △대구 등 11개 시도 20명

○ 분권위, 관계기관 의견 협의·조정 후 **사무기구 구성 방안 권고**

- 시행 초기 치안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관 정원 3명*** **외에 추가로 경찰관을 파견받을 것을 권고**

* 16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 제외) 사무기구에 경찰공무원 정원 각 3명(총경1, 경정1, 경위1)

□ 시범운영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시·도경찰청장-위원회가 협의**하여,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실시**(7.1. 전면시행)

○ **다수 시·도가 조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도경찰청 및 시·도 대상 컨설팅 제공**

3 정보경찰 개혁

□ 그간 추진성과

○ 경찰개혁위 권고('18. 4월) 이후 **'정보경찰 활동규칙(훈령)'을 제정**('19. 1월), 정보활동의 **개념 ·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관여 · 불법사찰 등 부적절한 정보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개혁 추진사항을 제도화

○ ▵ **외근인력 축소**(민생치안분야 재배치) ▵ **채증 · 소음 업무 · 인력 이관** 등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11.1%↓, '18년말 3,358명 → '20년말 2,985명)

○ **'준법지원계' 신설**('18. 7월), 법령·규칙 준수 여부 점검 등 **「준법감시 제도화」를 통해 내부통제를 실질화**하고, ▵ 정기사무감사 수감 ▵ 경찰위원회 보고(' 18년 2건 → ' 19년 5건 → ' 20년 10건) 등 **외부통제도 활성화**

- 개혁위 권고 · 法 개정 내용에 따라, **업무 성격이 드러나게 부서 명칭*도 변경**('21. 1. 1. 시행)하여 **비밀스러운 이미지도 탈피**

  * 정보국 → 공공안녕정보국, 정보1 · 2 · 3 · 4과 → 정보관리 · 분석 · 상황 · 협력과

○ 특히, ▵ **정보활동 범위 명확화**(경직법·경찰법) ▵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경공법) 등 **개혁법안 국회 통과**('20. 12. 9.)에 따라, 국민안전 · 위험예방과 무관한 **정치 · 민간 영역 정보수집 차단이 법제화**

- **(경직법 등)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 대응 정보'로 대체**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보다 더욱 포괄적인 **'정치관여 금지' 조항 신설** △**형량 상향**('3년' → **'5년' 이하 징역 · 자격정지**)

□ 향후 추진사항

○ **대통령령 제정**(1. 19. ~ 3. 2. 입법예고 중)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안전' · '위험예방' 등 정보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화 박차

- ▵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발굴 ▵ 백신접종 가짜뉴스 관련 정보활동 등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활동에 집중

○ **준법정보활동 안착**을 위해 **시도경찰청 준법지원 전담인력 확보** 등 **준법지원 활동을 내실화**하고 현장 점검 · 교육 강화

4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대비

□ 그간 추진성과

○ **(안보수사 전담조직 신설)** 기존 경찰청 보안국을 **국가수사본부 內 안보수사국으로 확대 개편**, 대공수사 외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수사 등 **다변화하는 안보위협에 전문적으로 대응**

○ **(내부통제장치 강화)** △내사첩보 평가회의* △안보사건 평가회의** 등 안보수사의 **내부 심의·통제** 강화를 통해 **공정성·신뢰도 제고**

* 전문 첩보분석팀 운영, 무분별한 내·수사 방지 / ** 내사 연장여부 심사, 입건 여부 심의 등

○ **(대공수사권 이관 협의)** 경찰청장-국정원장,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원활한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 **상호 협력 합의**('20.12.15.)

* '20.12.22. '警 안보수사국장'-'院 수사국장' 간 사전 회의 실시, 「안보수사 협의체」 신설 합의

□ 향후 추진사항

○ **(경찰-국정원, 「안보수사 협의체」 운영)** △합동수사 △전문교육 과정 개설 등 **국정원과의 협업 강화**를 위한 **협의기구 신설·운영**

※ 정례회의(국장급) 통해 추진사항 점검 및 국가 안보수사 관련 정책·제도 발전방안 논의

○ **(국정원 수사인프라 이관) 국가안보수사 역량의 총량 유지·발전**을 위해, **국정원의 수사인프라**(인력·예산·장비)의 **온전한 이관 추진**

○ **(선진국형 정보공조 체계 구축) 국정원과 수사기관 간** 정보공조를 의무화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안보 정보공유 협의기구」 신설 추진**

* 국정원법 제5조 제3항 : 국정원은 …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후속 법제 정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上 **대공수사 조정 조항 수정·삭제 및 정보협의기구 근거 마련** 등 **후속 법제 정비**

○ **(안보역량강화)** '**책임 안보수사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 및 국가 안보수사 총량유지를** 위해 **「경찰 안보수사 역량강화 3개년 계획」 추진**

- **<전문성 제고>** △해외·방첩·경제안보 등 분야별 전문가 채용 확대 △수사관 경력·직책 맞춤형 교육 △'안보수사 교육연구센터' 신설 추진
-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駐韓 외국 안보수사기관 주재관·지부장 등 외국 안보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Ⅳ. 중점 추진 법안

1 중점 추진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및 쟁점
1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경찰개혁)	◆ (주요내용) - (학장→총장) △직위 외부개방 △임기제(2년) △학내 추천위 설치 - (학비 개인 부담) 1~3학년 등록금은 개인이 부담, 수당 지급 폐지 - (운영에 자율성·책임성 부여) △총장에게 '교수 임용추천권' 부여 △'대학회계' 도입, 등록금 등 수입금을 자체 활용할 수 있게 함 ※ 임호선 의원('20.12.7.) 법안 발의
2	공인탐정법 제정 (국정과제)	◆ (주요내용) 사실조사를 업무로 하는 공인탐정 도입, 자격취득 및 영업등록 등에 대한 경찰의 감독체계 구축 ◆ (쟁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 공인탐정업 관리 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법무부) - 공인탐정업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반대(변호사 단체) ※ 이명수 의원('20.11.10.), 윤재옥 의원('20.11.26.) 법안 발의
3	도로교통법 개정	◆ (주요내용)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김영배 의원('20.8.11.) 법안 발의 -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권 확대 ※ 서범수 의원('20.11.17.), 서영교 의원('20.11.24.) 법안 발의 - 외국 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임호선 의원('20.7.30.) 법안 발의 -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의·의무 등 규정 ※ 임호선 의원('20.11.25.) 법안 발의
4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정과제)	◆ (주요내용)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 ◆ (쟁점) 치안산업 창업 지원 등 예산 소요 관련 기재부 반대 입장 ※ 윤재옥 의원('20.9.16.) <행안위 소위 계류중>
5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경찰 범죄예방진단 실시 △지자체 셉테드(CPTED) 시책 수립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셉테드 인증 ※ 윤재옥 의원('20.7.30.) <행안위 소위 계류중> / 김영배 의원 발의 준비 중
6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 (주요내용)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장애인·고령자·임산부·아동으로 구체화하고,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면책조항 신설 ※ 입법준비 중

[참고] 참석자 명단

참 석 자 명 단

	직위	계급	성명	주요 경력
	경찰청장	치안총감	김 창 룡	'64生, 부산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겸 수사국장	치안감	최 승 렬	'63生, 경찰청 수사심의관 경북청 제2부장 경찰청 수사과장
	기획조정관	치안감	최 관 호	'66生, 광주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전남지방경찰청장